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을 바란다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얼마 전 이상주 전 부총리가 퇴임하면서 “전교조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어떠한 교육개혁도 추진할 수가 없었다”며 전교조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한 나라의 부총리를 지낸 사람이 실패의 책임을 교원단체에 돌리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며, 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실패는 1995년도에 문민정부가 수립해 놓은 5·31교육개혁안을 계승하면서 비롯되었다. 교육부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국민의 정부는 경제논리에 치우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던 이 개혁안을 근본적인 검토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네스코에서는 한국의 교육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한 관변 교육학자들이 그곳에서도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세계적인 추세라며 도입해 온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보고, 학교를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재편하려는 정책이다. 이는 국가의 투자 없이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정책이다. 교원정년 단축, 7차 교육과정, 교원 성과급제, 자립형 사립학교, 전국 단위 학력평가제, 교육시장 개방, NEIS제도 등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이러한 정책들이, 교육투자와 교육민주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교육개혁 시민연대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 정부가 갈등을 일으킨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그리고 교육부의 관료주의적인 일방통행식 추진 방식도 갈등과 불신의 골을 깊게 해 온 주요 원인이었다. 정책의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교육관련 단체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교육 현장의 여건은 무시되었다.

참여정부가 교육에 성공하려면, 먼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은 시장에서 팔고 사는 상품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할 복지라는 교육철학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교육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궁극적으로 교육현장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없는 학교는 발전할 수 없다. 낡은 사고와 비민주적인 제도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학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변해야 한다. 학교는 지시와 통제의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육을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정보 지원센터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승진 점수의 노예가 되고 있는 교단 풍토를 바꾸기 위하여, 승진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관료적인 교장과 교감의 직무를 조정하여 보직제를 도입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형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학교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디 성공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바란다.